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소식지





겨울, 그리도 다시 봄

봄이 왔습니다. 여느 겨울보다 길게 느껴졌던 겨울도 시간의 힘 앞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노란 개나리가 얼굴을 내밀고, 여기저기 새싹들이 기지개를 펴듯 돋아나고 있는 걸 보자니 춥기만 했던 시루봉에도 봄이 오긴 왔나 봅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고 봄을 느낄 여유로움도 봄과 함께 왔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지천에 피어나는 곱디고운 꽃망울을 바라보며, 봄을 느낄 여유가 사람들에게는 아직 없나 봅니다. 아니,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 꽃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선거 현수막이 먼저 눈에 보이게 되니 봄보다 '선거'가 먼저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찍어줍쇼'라는 현수막에는 '진정성'을 쉽게찾아 볼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돋아나는 그 조그만 꽃망울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를 그 잘난 선거 현수막에 비교할 수는 없을 테지요.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험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만큼 기대하기 마련이고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기 마련인데 이건 좀 빠르다 싶을 정도입니다. '개발'과 '성장'의 환상으로 선택된 정부에 대한 실망은 '개발'과 '성장'에 대한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잘먹고 잘사는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경제성장 7%가 되면, 한반도 대운하가 건설되면 우린 행복할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한 게 아닌지 자문해봅니다.

지난 2월에는 소식지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더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겨울을 지나 다시 봄입니다. 현실은 황사가 몰아치는 듯 답답하시겠지만 그 속에서 꿈틀대는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 표지시진은 지난해 3월 1일 개최된 <3.1정신계승시민대회 및 지료전시회> 장면입니다.

유권자 중심의 선거 보도를

민진영 | 사무국장

○ 명박 정부의 신문법 폐지 및 개정을 통한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지역 언론의 심 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뉴스 전문 채널이나 종합 편성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여론을 독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론의 독과점은 지역언론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이는 여론의 다양성이 차단되며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가로막을 것이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언론사의 위기에 제한된 것이 아닌 지역 사회 전체의 위기라는 공감에서 지난 2월27일 경기민주언론시민엽합 교육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지역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경인언론노조협의회, 경인기자협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순기(전국언론 노조 수석부위원장) 발제자는 "이명박 정부의 신문정책이 현실화된다면지역신문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신문방송 겸영금지가 풀리고 신문 교차 소유가 허용되고 대기업이 신문 산업에까지 진출한다면, 지역 신문을 효율과 경쟁과 기업논

리로 몰고 간다면 과연 경기지역 신문이 설 자리가 있을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종만(경인언론노조협의회) 협회장은 "이번 $4 \cdot 9$ 총선 후보자에게 지역언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정책 중심의 보도로 유권자에게 선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거 보도 모니터를 강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선거보도 모니터를 위해 '2008총선미디어경기연대'가 구성되었다. 경인언론노조협의회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동으로 방송·언론사의 선거 보도를 비판·감시하여 주가 단위로 발표할 계획이다.

'2008총선미디어경기연대'는 유권자의 정치적 냉소와 혐오를 확산시키는 보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지역주의 선거보도, 선정적인 경마식 보도, 근거 없는 음모론과 흑색선전, 의혹 폭로 등의 부정적 선거보도를 감시할 것이다.

또한 정책중심의 보도,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는지,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위해 신진, 소수, 진보 후보를 충분히 보도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람직한 선거보도는 유권자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한다.

언론사들은 정책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의제를 세분화하여 각 정당 및 후보자간 정책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평가를 보도해야 한다.

후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일정을 보도하고, 중앙당 지원 유세를 따라다니며 세를 과 시하는 보도행태는 유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과거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 홍보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후보의 지지율만을 조사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유권자를 통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려는 노력과 정책관련 질문을 늘려야한다.

언론은 역대 선거 때마다 공정하고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공론장의 구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미디어선거 정착'이라는 과제는 그저 허울뿐인 슬로건으로만 남아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이번 $4 \cdot 9$ 총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보도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여 독자로부터 신뢰를 회복, 지역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인천일보_2008년 3월 5일자



☑ 특집 : 멈춰라, 경부운하!

도대체, 국토의 심장을 파헤쳐서 뭘 하려는가?

편집부

한강과 낙동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다. 억겁의 세월을 지나오며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반만년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이다. 그 유산을 경제논리 하나로 파헤쳐 운하를 만들려는 행태는 후손들에 대한 범죄행위다. 저절로 흘러 생긴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파헤쳐 돈 벌이를 하려는 발상은 자연과의 공존을 통해 미래 대안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21세기 사상의 흐름과도 배치된다. 또한 강줄기를 따라 수천 년동안 형성된 문화유산은 어찌할 것인가? 그 문화유적 속에 담긴 소중한 얼을 파헤쳐서 돈벌이를 하려는 퇴행적인 역사와 천박한 가치에 분노한다.

'한반도 운하' 공약 속에 담겨있는 가치와 철학의 빈곤



경부대운하는 '물류혁명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 2의 경제도약'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달고 있다. 하지만 국 내외 경제학자와 물류전문가들의 연 구와 현실적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고 그러한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혀내고 있 다. 1980년대 이후 사양길로 접어드는 운하사업은 청정운송도구인 철도와 고속도로의 경쟁력에 밀려 일분일초 를 따지는 물류업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부운하 찬성

론자들이 관광수입으로 투자비용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를 반증한다. 자연과 환경은 원상태로 보존될 때 최상의 가치를 발하는 법이다. 관광수입을 위해 국토의 심장을 파 헤치는 것이 과연 선진화이고 잘사는 모습인가? 명분과 실리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 지 못하는 한반도 운하 계획은 개발이익에 눈 먼 투기꾼들의 정치놀음이요 '제2의 경 제도약'이 아닌 '대한민국 재앙'이다.

먹는 물에 꼭 화물선을 띄워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한강과 낙동강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생명줄기이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강은 수심도 얕은데다 계절에 따라 수량의 편차도 심하다. 게다가 수천 의 지류로 형성된 강줄기를 뱃길로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로 벽을 쌓고 물을 막는다면 그 물이 온전할까? 그 가운데로 저질의 연료를 태우는 수천 톤짜리 배들이 오가고, 혹

시 대형 사고라도 터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도대체누구를 위해 천문학적 돈을 투자하여그 대책을 세우는 것인가? 반나절이면 국토의 끝에 도달하는 좁은 국토에다 반도국가인 우리나라 물길은 삼면에 널려있다. 그 물길을 놔두고 고작 하루 12척의 배를 오가게 하기 위해 국토의 심장을 파헤치는 한반도운하계획의 무모함과 불합리함이 온전함으로 포장되는 작금의 상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시루봉을 통해 소위 이명박운하라고 불리우는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의견을 실어본다. 물론 운하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도 함께 실어야 공평하겠지만, 보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하는 내용은 아마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 볼 수을 것이다.

한반도 전체의 자연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삶을 황폐화 시킬 수 있는 '빛좋은 개살구' 한반도 대운하를 막아내는 것, 이제부터 시작이다.

☑ 특집 : 멈춰라, 경부운하!

'경부운하' 수도권 상수원 위협

안명균 |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경부운하건설 계획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제성도 없으며 문화유산 훼손, 갈등조장과 국론분열, 홍수 피해, 식수대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시민의 의견에 반해 강행 추진하려는 '경부운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경부운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프로젝트' 라는 비판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며칠 전 소위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운하를 반대하는 이들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



대"만 하는 사람들이라며 비난하고 반대에 굴하지 않고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며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 운하건설계획에 우려를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의 생각이 무시해도 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현재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댐은 경기, 서울, 인천 2500만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2500명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수도권 인구의 급증 추세가이대로 계속된다면 2020년경에는 3000만 가까운 시민이 팔당상수원은 식수로

이용할 것이다. 전국인구의 절반이 살아가는 수도권이 식수원이 경부운하건설계획으로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운하를 건설하면 수질, 환경이 개선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운하건설을 주장해 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 측 인사들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홍 준표 의원이 주장한 "전 세계에서 운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는 주장이 사실임을 아는지 상수원을 안전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소위 강변여과수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통속이 되어 경부운하건설에 적극적인 경기도 김문수지사는 대통령선거도 끝나지 않은 작년 6월부터 팔당상수원 취수장을 청평댐 등 북한강 쪽으로옮기는 것을 검토하여 왔다. 하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검토에서도 취수장 이전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 가평군 등 취수장이전지역의 반대로 당혹스러운처지가 되었다. 한반도 대운하TF팀의 '수도권 상수원의 새로운 해법'이란 문건과 최근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운하 건설에 따라 수도권 주민들의 취수원을팔당 상류인 북한강 유역으로 옮기면 취수 가능한 물량은 하루 560만~600만톤에 그쳐 현재 취수량인 791만톤보다 190만~230만톤이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하루 물 사용량 3201를 기준으로 경기도 인구의 절반이 넘는 600여만 명이 쓸 수있는 양이다.

이렇게 부족한 수량을 소위 강변여과수로 확보하려면 $20\sim30$ 곳이 넘는 지역에 강변여과수 취수장을 건설해야 한다. 한강변이 모두 모래밭은 아니며 자갈과 암반 등 강변여과수 시설 설치물가능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은 미국에 있는 13만톤 규모의 시설이다.)

더구나 현재 수도권 인구의 급증을 고려하면 수도권 에 추가로 200~300만 톤의 물을 더 확보해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경부운하 건설을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 경부 운하T/F팀을 구성하고 대체상수원 계획을 다시 검토해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 리 정해진 결론에 짜 맞추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와 김문수 지사는 경부운하계획을 '국토대개조를 통한 국운융성계획'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대개조 사업을 소위 '명품뉴타운' 건설이나 '복개하천복원' 정도로 취급하며 반대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기들끼리 모여 소위 10년간(?) 연구해온 잘못된 계획으로 경부운하를 강행한다면 이는 수만 년간 하천과 더불어 살아온 우리의 역사와 수많은 생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당선인 측의 신중한 판단과 겸허한 의견 수렴이 절실한 실정이다.

☑ 특집 : 멈춰라. 경부운하!

경부운하 관련 지역보도의 문제

편집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경부운하에 대해 찬반 논란이 심회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류운송 효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등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서울대 교수와 시민단체, 종교인들이 경부운하는 물류운송 효과도 미비하고 식수원 파괴와 환경재앙이 예상된다며 경부운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총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경부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운하 건설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팔당지역 시·군 '대운하' 여객·화물터미널 유치경쟁

양평·하남등 TF구성 본격활동 , 하남 환경·시민단체, 즉각 반대성명 발표

2008년 02월 18일 (월)

이강범·이윤회조케yhigh@kyeon

팔당지역 경기도 내 시 군들이 앞다퉈 차기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여 물터미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구성해 본격적인 여객 화물터미널 유치에 나섰다.

이에 대한 지역 언론의 2월 한 달간의 보 도를 살펴보면 경부운하 건설의 경제적 효 과, 환경적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 닌 인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의 입장을 단순 중계 보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특히 터미널 유치가 예상되는 지역의 17일각시군에따르면양평군은총무과장등총 5명으로구성된한반도대운하태스크포식 부동산 급증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 적인 부분을 주로 보도하였다.

> 전문가의 의견을 보도한 것은 한 달 간 단 두 신문이었다. <경기신문>은 1일 20면, 노 생만 변호사가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단상〉에서 경부운하 찬성에 대한 입장을 보도 했고 〈인천일보〉는 18일 11면,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경부운하 수도권 상수도 위협〉에서 경부운하 건설을 반대했다. 즉 국가, 경기도의 주요의제에 대해 전 문가의 의견을 독자에게 전달하지 못했고 "한반도운하로 도 북부 발전 가능성"을 말했 던 도지사와 터미널 예정지인 양평, 광주, 하남, 남양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의 보 도였다. 즉 언론의 책임, 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찬반 양측의 공정한 보도와 발로 뛰는 기사가 부족했다.

〈경부운하 관련 각 신문사의 보도 분석〉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보도 수	8건	4건	6건	4건	8건
기시이 선거	단순 7건	단순4건	단순 5건	단순3건	단순 8건
기사의 성격	칼럼 1건	인군4건 	분석 1건	칼럼 1건	
기사 출처	지방자치단체(장)7건 칼럼 1건	지방자치단체(장)3건 시민단체1건	지방자치단체(장)4건 시민단체 2건	지방자치단체(장)2건 시민단체 2건	지방자치단체(장)6건 시민단체 2건
기사 내용	찬성 8건	찬성 3건 반대 1건	찬성 4건 반대 2건	찬성 2건 반대 2건	찬성 6건 반대 2건

〈경부운하관련 보도의 문제점〉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보도 자료)에 치우쳤다.
- 2. 분석기사 보다는 단순 중계의 보도로 치우쳤다.
- 3.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 특집 : 멈춰라. 경부운하!

경기지역, 경부운하 반대운동 GO! GO!

편집부

경기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가 팔당상수원을 파괴하는 경부운하 반대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지난 3월 18일 경기민언련·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를 비롯한 경기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이경기도청 앞에서 '팔당상수원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지역에서 본격적인 한반도 운하 반대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경기행동은 "70년대식 '막개발연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운하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을 출범시킨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운하 전도사로 나서고 있는 김문수경기지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선포하고 나섰다.

아래는 경기행동 발족선언문이다.

팔당상수원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발족선언문

이명박대운하 건설은 역사, 문화, 환경에 대한 천박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2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반만년 역사와 삶 그리고 한반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오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수이며 삶의 터전인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의 개발권을 국민적 합의 없이 소수의 건설기업에게 넘겨주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이다.

운하건설의 타당성이 없다는 기존의 국책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운하건설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건설이 '국운융성'의 지름길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조사와 계획수립조차 하지 못한 사안을 가지고, 밀실에 앉아 상수원과 하천 그리고 각종 개발과 관련된 '법'을 초월하는 운하특별법을 1년 안에 만들겠다고 한다.

경기도 김문수 도지사는 상수원 취수장 이전 등 경부 대운하에 찬성하는 '전도사들'만을 불러 내부 강연을 잇따라 여는 등 운하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수도권 주민들의 취수량 확보와 먹는 물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빠진 채 주객이 전도된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운하를 추진하려고 하는 행태는 경기도민의 상수원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내산업의 발전 추이와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운하건설은 국내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떨어 뜨릴 것이다. 또한 내륙항만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땅 투기 현상은 5대강 전 지역으로 확 산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 공동체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환경파괴의 악취를 향수로 막을 수 없듯이 제방으로 홍수의 위험을 막을 수 없으며, 강변여과수로 5천만 국민의 식수를 대신할 수 없다. 또한 운하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벗인 강과 산을 대신할 수 없듯이, 운하관광이 금수강산 관광을 대신할 수 없다.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칼' 대신에 '돈'을 들고 운하를 건설한다고 해서 신개발 독재가 민주주의로 둔갑할 수 없다.

그동안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종교인 생명평화 순례 100일 대장정,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 한국작가회의의 르포 등등에서 운하건설 반대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운하가 건설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의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건설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 경기도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그동안 한강을 끼고 있는 고양, 김포, 남양주, 양평, 여주 등 곳곳에서 운하백지화를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건설사 등 70년대식 막개발연대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허상을 가지고 경기도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운하건설을 저지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는 오늘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을 출범시키고자 한다.

운하백지화 경기행동은 신개발독재의 상징인 운하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서 경기도민들과 함께 운하백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들은 운하건설에 있어서 환경적, 문화적, 경제적 문제점을 과학적이고 대중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 우리들은 운하건설 사업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치체계를 흔들며,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임을 알려 낼 것이다.
- 우리들은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 경기도민들과 함께 운하 건설을 저지할 것이다.

2008년 3월 18일 팔당상수원을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최시중 임명 강행, 국민은 피곤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최시중 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도덕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으며 방송현업인, 언론관련 3개 학회, 시민사회 모두가 반대하는 최 씨를 왜 이렇게까지 고집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정녕 언론계와 방송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생각인가?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서 대선 시기 '이명박 캠프'의 핵심멤버인 최 씨가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명박 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이다.

지난 3월 17~18일 열린 최 씨 인사청문회를 본 사람이라면 최시중 씨가 결코 방통위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제기되는 의혹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고 방송통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질문에 '귀신이 곡할 노릇', '귀신이 땅을 팔았다고 생각한다'는 등 수준 이하의 답변을 내놓아 국민들을 절망케 했다. 이 때문에 최 씨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국회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만 믿고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심각한 민심 이반에 처해 있다. 대통령과 국민이 모두 피곤하다고 한다. 최시중 씨 임명 강행은 국민을 다시 한 번 피곤하게 만들고 이명박 정부를 더 큰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

그가 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 하더라도 언론계는 그를 위원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방송계와 통신계의 혼란은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최시중 씨의책임이다.

2008년 3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운하건설 전도사로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경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경부운하건설 계획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경제성도 없으며 문화유산 훼손, 갈등조장과 국론분열, 홍수 피해, 식수대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시민의 의견과 맞서 강행 추진하는 '운하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 오염과 파괴가 우려되는 운하건설계획은 팔당호를 유일한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11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팔당상수원 보호와 관련한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운하건설 논의를 계기로 상수원 이전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어 상수원 수질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취수장을 북한강 수계로 이전할 경우, 400만톤/일 이상의 수량이 부족하고 약 3-4조원 이상의 이전비용이 예측되어 상수원 대체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운하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대체상수원인 강변여과수도 2002년 수자원공사 조사에 따르자면 한강수역에 총 6개소 약 12만톤/일만이 개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은 운하전도사로 앞장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검토지시를 받은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100만 경기도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자신의 공약인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마구잡이 운하건설의 전도사로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경기도청 내에 경부운하T/F를 구성하고, 상수원 이전 등 운하건설을 위한 각종 검토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자칭 이명박운하의 전문가들이라하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등을 불러 〈대운하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운하건설 사업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무슨 권한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가?

한술 더 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랜 갈등과 논의를 통해 경제성이 없어 추진이 중단된 경인운하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친김에 경기도의 임진강하구에서 함경도 원 산으로 가는 경원운하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하건설을 지도에 줄긋기 정도로 판단하는 한심한 작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1조 7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1100만 경기도민에게 약속하였다.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팔당상수원을 파괴할 것이 명백한 운하건설에 반대하고 상수원보전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자신의 공약도 헌신짝 버리듯이 무시하고, 1100만 도민의 생명수의 안전보다 권력자의 해바라기로 건설업체의 하수인이 되기를 자청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11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경기도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부운하T/F를 즉각 해체하라
- 1. 경기도민의 혈세로 진행한 팔당상수원 이전 검토 계획의 실체와 내용을 공개하라
- 1. 권력의 해바라기가 되어 팔당상수원 파괴를 부추켜온 행위를 1100만 경기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경부운하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해 노력하라

2008년 3월 18일 팔당상수원 위협하는 운하 백지화 경기행동

2.3월 활동소식



□ 1기 글쓰기 강좌 마무리

지난 2월 12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전10시에 진행됐던 1기 글쓰기 강좌가 3월 20일 마무리됐다. 총 16강좌로 구성되어 진행된 이번 1기에 는 평균 12명 정도가 참석하여 자신의 삶과 생각을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성찰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좌를 흔쾌히 맡아주신 양훈도(전 경인일보 논설위원), 최준영(평론가), 박남희(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좌 마지막날 1기 반장(?)을 선출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선님입니다. 이후 1기모임과 후속교육 등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 조문기 선생님 영결식

일제치하 '대한애국청년단'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조문기 선생님이 지난 2월 5일 영면하셨습니다. "친일인명사전을 들고 가야조상님들을 뵈올 수있다"며 5년여 전 부터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정열을 쏟으시다, 친일인명사전 출간을 못보고 영면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경기민언련에서는 장문하 상임대표와이주현 공동대표, 최준영 운영위원께서 영결식에 참여했습니다.



■ 2008년 상반기 전국민언련 대회 참가

지난 2월 22일-23일 창원에서 2008 전국민언련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발표:신태섭 대표)과 FTA비준안 에 있는 미디어영역의 문제점(발표: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의 발표로 변화하는 미디어영역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각 분과별 모임(모니터, 회계및 회원관리, 퍼블릭액세스)과 2008년 공통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모임은 대전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2.3월 활동소식



■ 2008 총선미디어연대 발족 기자회견

지난 2월 26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실에서 2008 총선 미디어연대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민언련, 전국언론노조렵 의회, PD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민우회 등 전국의 언론단체들이 모여 2008년 4월 9일 치러지는 총선에 공동모니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발족 기자회견은 김서중(민언련)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민진영(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의 활동계획, 김언경(민언련) 협동 사무처장의 감시준칙 발표,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처장의 제안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지역언론' 토론회

지난 2월 27일(수) 오후 2시시루봉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지역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민(전북 민언련) 정책 실장이 제1 발제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정책과 대응방안 - 매체환경의 변화와 지역방송'을 발표했고 김순기(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2발제로 '이명박 정부의 신문정책과 경기지역신문'을 발표했습니다.



□ 삼일정신계승 시민대회 및 자료전시회

지난 2월 27일(수) 오후 2시시루봉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과 지역언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홍숙영(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민(전북 민언련) 정책 실장이 제1 발제로 '이명박 정부의 지역언론정책과 대응방안 - 매체환경의 변화와 지역방송'을 발표했고 김순기(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제2발제로 '이명박 정부의 신문정책과 경기지역신문'을 발표했습니다.

- 김상문 운영위원님이 동탄에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채식뷔페를 오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류현희, 김세영 회원이 학예연구사로 수원박물관에 취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최준영 운영위원이 노숙인을 위한 잡지 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 정종훈 회원이 늦동이 돌잔치(3/22)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홍숙영 운영위원께서 3/21 〈다문화 미디어 콘텐츠 현황과 전개〉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월 CMS회비출금

강진철 구대서(2) 권혁용 김경호 김기현 김명훈 김미경(2) 김상돈 김상형 김상회 김수진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용주 김용환 김우영 김유성 김유진 김일천 김재범 김종구 김종호 김준혁 김학균 김학주 김해진 김형인 민진영 박득진 박소원 박우석 박종아 박 진 박철하 박흥석 박희숙 서정문 서주애 서지현 송기출 송명희 송원찬 송주현 송준호 신용승 양태환 양훈도 엄미자 염상균 오세진 오승섭 오제식 유문종 유연희 유주호 유희준 윤성근 윤수희 윤은상 윤재훈 윤철수 엄민용 이가영 이강진(2) 이경옥 이귀선 이기원 이달호 이대수 이동근 이명관 이명수 이무섭 이미연 이민식 이삼노 이상무 이상훈 이선경 이선호 이선희 이순환 이승억 이영이 이윤업 이은실 이재교 이종대 이주현 이철원 이호헌 이홍렬 임이화 임충 장문하 장준호 정문옥(2) 전상천 정연훈 정훈록 조상민 조성범 조성찬 조영달(2) 조탁준 조혜원 조환구 차규남 최광희 최민경 최원정 최은아 최종식 최준영 최춘일 최형식 표신중 하태균 한경규 한경윤 한명준(2) 한영호 홍흥식

2월 CMS회비출금

강진철 강희 국헌 권혁용 김경호 김기현 김명훈 김미경 김상돈 김상형 김상회 김수진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옥란 김용주 김용환 김우영 김유성 김유진 김일천 김재범 김종구 김종호 김준혁 김태연 김학균 김학주 김해진 김형인 남길현 민진영 박계순 박공우 박득진 박소원 박우석 박종아 박 진박철하 박흥석 박희숙 서정문 서주애 서지현 손대선 송기출 송명희 송원찬 송주현 송준호 신용승양은선 양태환 양훈도 엄미자 염상균 오세진 오승섭 오제식 유문종 유연희 유주호 유희준 윤성근윤수희 윤은상 윤재훈 안병주 엄민용 이가영 이강진 이경옥 이귀선 이기원 이달호 이대수 이동근이명관 이명수 이무섭 이미연 이민식 이삼노 이상무 이상훈 이선호 이선희 이순환 이승억 이영이이윤업 이은실 이재교 이종대 이주찬 이주현 이철원 이호헌 이홍렬 임충 장문하 장준호 장진아전상천 정연훈 정해득 조상민 조성범 조성찬 조영달 조탁준 조혜원 조환구 차규남 최광희 최민경최원정 최은아 최종식 최준영 최춘일 최형식 표신중 하태균 한경규 한경윤 한동민 한영호 현은미홍경표 홍흥식

※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누락된 분은 사무처로 연락바랍니다.



경기민언련 회원의 날에 초대합니다!

☞ 일시 : 4월 12일(토) 오전 8시 집결 (프로그램은 오후4시30분경 마무리)

☞ 프로그램 : 남한강(경부운하 예정지) 체험

☞ 집결장소 : 장안문 농협 앞

☞ 회비 : 성인 2만5천원, 청소년 및 아동 2만원

(차량비, 점심, 입장료, 행사진행비, 여행자보험 등)

☞ 참가신청 : 사무처 244-7632 minjumedia@daum.net

〈프로그램〉

시 간	내용	장소
10:00 - 10:30	 다리와 운하의 관계 및 문제점 이해 교각에 표시된 수위표를 보면서 홍수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영월루 주차장 집결 여주대교
10:30 - 11:10	- 운하의 기본원리 이해하기 - 갑문의 형태 및 갑문의 설치로 발생되는 문제 알아보기	양촌리 여주갑문 예정지
11:10 - 12:00	 - 운하와 남한강 옆에 위치한 신력사 관계 이해하기 - 신력사 문화재 해설 듣기(문화해설사) - 남한강의 조포나루터 둘러보기 	신륵사
12:00 - 1:00	- 신륵사에서 점심 공양	신륵사
1:00 - 1:20	- 금당천 제방의 문제 알기 - 강 중간 운하길 이해하기 - 지천과 본천과의 문제 이해하기	금당천
1:20 - 2:00	- 토목공사의 문제점 및 운하건설의 위험성 이해하기 - 남한강교는 무슨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나?	영동고속도로 남한강교
2:00 - 4:00	 남한강 최대의 갈대 숲 즐기기 느끼기 습지 이해하기 / 물새 관찰하기 갈대로 피리 만들기 / 엄마야 누나야 노래 부르기 동물 발자욱 석고 뜨기 / 조용히 명상하며 말없이 길기 	굴암리 남한강변
4:00 - 4:20	- 서로의 느낌 나누며 정리하기	본말 남한강변